

고영주, 김영란법 3중세트 위반



고영주-김기춘-김삼천 골프 회동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MBC 자회사인 iMBC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근교 최고급 골프장중 하나인 뉴코리아 CC에서 1인당 골프비용만 30만원에 달하는 호화골프를 즐겼다. 함께 골프를 즐긴 동반자 면면도 화려했다. 박근혜 정권의 핵심 실세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화방송 2대 주주인 김삼천 정수장학회 이사장, 그리고 허연회 당시 iMBC 사장 등이다.

허연회 골프비용 대납... 고영주 김영란법 위반

그런데 이날 골프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지 않았다. 고영주 이사장과 김기춘 전실장의 그린피 등 골프 비용을 회동 당일 허연회 사장이 법인카드와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한다. 고영주 김기춘 등 예전 홍삼세트와 MBC 기념품 등의 선물도 건네

줬고, 특히 고 이사장의 골프장 ‘픽업’엔 iMBC 관용 차량과 기사가 동원되기까지 했다. 동반자들의 구성 자체도 부적절하고 수상쩍지만, 향응과 선물까지 오간 불법 접대였던 것이다.

이 골프 접대는 특히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직후 보란듯이 행해졌다. 골프비용 대납은 물론 이동 차량 제공, 그리고 고가의 선물까지, 김영란법이 모두 금지하고 있는 3중 불법 세트가 한꺼번에 자행된 것이다. 고 이사장은 자신이 내야할 그린피 등을 허 사장에게 사후 송금했으니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공공기관의 수장이 접대 사실을 당국에 즉시 신고하지 않아 김영란법을 추가로 위반한 사실만 실토한 꼴이다.

MBC 골프회원권도 제멋대로 사용

사실 고영주 이사장이 골프 접대를 받은 건 이 뿐만이 아니다. MBC 임직원들의 업무용으로만 쓰도록 돼 있는 경기도 가평의 또 다른 골프장 ‘무기명 회원권’도 여러 차례 사용했다. 출연자 섭외나 광고주 행사등 공식 업무에 써야할 MBC의 골

프회원권을 MBC 임직원도 아닌 방문진의 이사장이 ‘자신이 모시는 사람들’과 함께 흥청망청 사용했다. 이것은 접대를 넘어 부당한 이득까지 취한 ‘배임 수재’에 해당한다. 언제부터 방문진 이사장이 MBC의 업무상 자산을 제멋대로 이용해 자신의 잇속과 향락을 취해왔단 말인가.

검찰 고발...추가 폭로 예정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고영주 이사장뿐만 아니라 방문진의 다른 이사들의 비리들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취재에 착수했고, 확인되는 대로 하나씩 폭로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들이 MBC를 뜯어먹도록 협조해온 MBC 전현직 경영진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 사이에서 자행된 온갖 불법과 탈법의 배경에 또 어떤 부정이나 청탁, 대가들이 오갔는지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그리고 건건이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 의뢰해, 악취가 진동하는 음흉한 카르텔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그린피에 차량에 선물세트까지…풀코스 접대

18홀 회원제로 운영되는 뉴코리아CC는 골프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그린피가 비싸기로 유명한 곳이다. 위치도 서울 근교여서 상암MBC에서 차로 20분만 달리면 클럽하우스에서 짐을 내릴 수 있고 강남에서 출발해도 40분 안에 도착할 만큼 매우 가깝다.

뉴코리아CC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다 보니 예약이 어려울뿐더러, 예약이 된다고 해도 회원권이 없는 이용자의 경우 주말에는 24만원 정도의 그린피를 부담해야 한다. 캐디비용 12만원과 전동 카트비용 8만원, 그리고 식사 비용 등을 더하면 1인이 부담하는 골프 비용은 30만원을 훌쩍 넘어선다.

고영주·김기춘, 그린피 대납 알고도 태연

이런 고급 골프장 뉴코리아CC에서 지난해 10월 22일, 당시 iMBC 사장이던 허연회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에게 풀코스로 골프를 접대했다. 김 전 실장의 그린피는 iMBC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고 이

사장의 그린피 역시 허 사장이 현금으로 결제했다. 당시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매우 민감한 시기였지만,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고 이사장은 심지어 “당시 허연회가 나름대로 신경써서 접대를 하려고 했던 모양”이라고 말하는 등 골프 접대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수십만원대 선물과 차량 제공… “50만원 보냈다” 황당 해명

허 사장은 휴일이었는데도 iMBC 천복용 이사장의 업무용 차량과 기사를 고영주의 집으로 보내 골프장까지 극진히 모셨다. 허 사장은 “업무 연관성에 따른 편의 제공 정도로 괜찮을 줄 알았다. 법률적 지식이 없었다”며 면피성 발언을 쏟아내는데 급급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당초 “천복용의 차로 뉴코리아CC에 간 적이 없다. 이 말에 책임질 수 있다”고 했다가, “어디의 누구 차인지 모르고 이용했던 것 같다”며 말을 바꿨다.

홍삼세트와 장난감 등 수십만원 상당의 선물(사진)도 제공됐다. 고 이사장은 “선물은 안 받았



을 거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다가 “(홍삼세트 등을 받았다면) 그게 얼마나 하겠느냐, 아무리 따져도 부족하지 않게 보냈다”라고 주장했다. 허 사장에게 50만원을 돌려보냈다고 그 돈으로 골프비용과 차량, 선물까지 모두 계산했다는 것이다.

당시 고 이사장의 그린피를 대납한 허 사장은 그린피 대납이 아니라 고영주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법률가인 고영주가 빌린(?) 돈을 돌려보내면서 금액을 자의적으로 50만원으로 책정해 보냈다는 점 역시 석연치 않다. 돌려받은 금액이 왜 50만원이냐는 조합의 질문에 허연회는 “(고영주가 금액을) 여유있게 돌려준 것 같다”는 황당한 해명을 늘어놓았다.

직원에게 ‘김영란법’ 준수 강조…이사장은 예외?

문제의 골프 회동이 있었던 시기는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0월이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 회사는 ‘김영란법 준수는 우리의 자긍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판에 공지했다. 이 글에서 회사는 “김영란법이 부정한 목적의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폭넓게 금지하고 있는 만큼 자의적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까지 관행으로 또는 원활한 업무 수행상 주고받던 행위들도 이제는 적법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보고, 불확실할 경우 국민권익위 같은 담당기관이나 회사 청탁금지법 담당관에게 유권해석을 받는 확인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내 교육에서도 “자회사 접대행위 절대 금지” 수차례 강조

회사는 앞서 9월 19일부터는 전 직원을 상대로 ‘김영란법을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했고, 9월 8일과 12일, 20일과 21일에는 1층 골든마우스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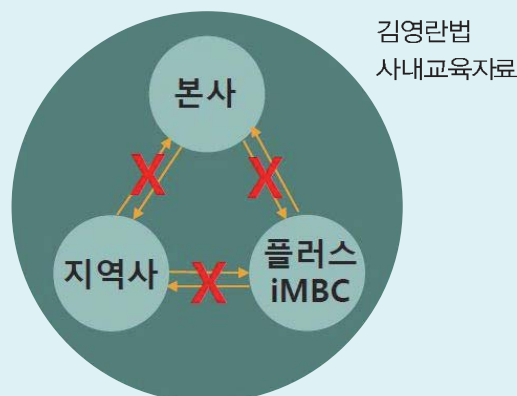
에서 외부 변호사 등을 강사로 초빙해 김영란법 관련 강의를 진행하는 등 지겨울 정도로 직원들에게 김영란법 준수를 강조했다.

그런데, 이 당시 회사의 강의 자료 가운데에는 이번 골프 회동이 왜 문제가 되는지 잘 설명해 놓은 대목이 있다. 회사가 그룹웨어에 올린 ‘김영란법 사내 강의용 자료’를 보면 회사는 친절하게도 골프 접대를 예로 들며 본사와 지역사, MBC 플러스나 iMBC같은 자회사간 상호 골프 접대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iMBC가 언론사의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분류해 놓고 있다. 당시 강의를 들었던 다수의 직원

들도 “강의 도중 회사 관계자가 자회사로부터 골프는 물론 식사 접대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강조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술선수법’은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지만,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교육한 내용조차 먼저 어기는 건 또 무슨 경우인가.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데도 몰랐다?

더구나 당시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초기여서 전국민이 사소한 접대와 선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던 시기였다. 그런데도 검사 출신의 고영주 이사장은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 “내가 알 바 아니다”라거나, 정관장 홍삼세트 등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가격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등의 후안무치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회사가 ‘김영란법에 대한 자의적 판단은 위험하다’고 그토록 강조했음에도 감독 기관의 수장 고영주는 오만한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권실세와의 수상한 골프 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삼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iMBC 허연회 사장 4명이 모인 이날골프 회동은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권실세가 포함된 이 골프 회동을 누가 왜 마련했는지, 무슨 얘기가 오간 건지, 누가누굴 접대한 건지 모두 석연치 않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영어의 몸으로 접촉할 수 없는 김기춘 전 실장 이외에 모든 회동 멤버들에게 접촉을 시도했다. 김삼천 이사장은 처음 통화에선 “김기춘 전 실장과는 골프를 여러 차례 쳤다. 언제 누구와 쳤는지 멤버와 일정을 확인해 다시 통화하자”고 했지만,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남은 두 명의 멤버, 고영주 이사장과 허연회 현 부산 MBC 사장을 만나 자세히 당시 상황을 들었다. 하지만 둘의 말도 엇갈려서, 궁금증은 더욱 증폭됐다.

‘왕실장과의 골프’ 호스트는?.. “기억 없다”

공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정권 실세였던 김기춘 전 실장, MBC의 대주주 두 곳의 수장, 그리고 MBC 자회사의 대표. 서로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아니 만나는 게 부적절해 보이는 이들을 누가 왜 한 자리에 불러 모았는지 부터가 수상하다. 고영주 이사장은 “김기춘 전 실장은 현직 때 검찰총장으로 모셨다”면서 “내가 (골프를) 모시는 것도 아니고 초청 받아 같이 운동하는 게 어때냐”는 반응을 보였다. 누군가 자신과 김기춘 전 실장을 각각 따로 불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기춘 전 실장 역시 모임의 주최자가 아니라는 얘기다. 허연회 당시 iMBC 사장은 “내가 그 분들에게 연락해 주도적으로 모을 입장은 아니지 않은가, 누가 어떻게 멤버를 꾸렸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골프장을 예약한 사람도 “기억에 없다”고 했다.

라운딩만 5시간... 무슨 얘기 나눴나?

통상 골프를 치면 멤버들은 아침식사와 라운딩, 목욕과 점심식사까지 최소한 대여섯 시간을 함께 보낸다. 친목 모임도 아닌 이 불분명한 이 골프 회동에서 긴 시간 동안 서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공교롭게도 회동 시점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테블릿PC에 대한 폭로 보도가 나오기 직전 주말이었고 이미 여러 언론사가 국정농단 사태를 취재하던 시기였다.

고영주 이사장은 회동이 예민한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자 “테블릿 PC 보도가 나올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었겠냐, 제갈공명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기춘 전 실장도 테블릿PC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감싸면서, “MBC와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허연회 사장은 “iMBC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다”며, “회사 얘기하고 자문 받는 자리 역시 업무의 하나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iMBC 이후 부산 MBC에 가려고 로비하거나 청탁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려다 나온 얘기지만, ‘iMBC의 미래 먹거리’를 당시엔 현직도 아니었던 김기춘 전 실장에게 ‘설명’까지 해야 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엇갈린 해명... 복잡한 비용 처리

골프 비용 처리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도 불분명하다. 당사자들의 해명도 서로 엇갈린다. 고영주 이사장은 “허연회 사장이 그러면 안 되는데, 아마 나름 신경 써서 접대하려고 했는지 이미 계산을 해 버렸다”며, “거기서 현금을 주면 나중에 해명이 안 될 것 같아, 계좌번호만 물은 뒤 송금해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골프장에서 문제의 소지를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허 사장의 결제를 취소한 뒤 다시 본인이 결제하면 된다. 관행처럼 그냥 접대를 받았다 뒤늦게 조치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반면, 허연회 사장은 처음엔 자신이 모두 법인카드로 계산했다고 말했다가 고영주 이사장에게 현금을 빌려줬다고 말을 바꾸더니 최종적으로 “고 이사장에게 현금을 빌려주듯 대납해줬다”고 해명했다. 대납 이유에 대해선 “고 이사장이 지갑을 안 가져왔다든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은 고 이사장이 아니라 본인과 김기춘 전 실장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허 사장의 주장대로라면 골프 비용 계산은 아래와 같이 처리됐다.

〈허연회 사장 주장〉

고영주 → “허연회 현금 대납”

김기춘 → “허연회 법인카드 결제”

허연회 → “허연회 법인카드 결제”

김삼천 → “본인 결제”

고영주, 김기춘, 자신 이렇게 세 명 분을 결제해야 했는데, 굳이 복잡하게 한 명은 현금, 두 명은 카드로 나눴다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비용처리 방식이다. 허 사장 자신도 “왜 한 명은 현금으로 하고 한 명은 카드로 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사후 처리 방식도 이상하다. 허 사장은 “고영주 이사장 비용은 빌려준 돈이라 돌려받았으며 김기춘 전 실장의 비용도 며칠 뒤 김삼천 이사장을 통해 현금을 받은 뒤 골프장에 가서 법인 카드 결제분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다시 정산했다”고 해명했다. 해명을 들을수록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속사정을 감추기에 급급하다는 인상만 강해진다.

결론은 언론 독립을 참칭하면서 고영주 이사장은 정권 실세와 호화롭게 골프를 즐겼다. 관리 감독 대상인 자회사 사장으로부터는 아무렇지도 않게 차량과 선물까지 받았다. 회동 자체가 부적절하고 그 목적과 내용은 더욱 수상하다.

본업보다 접대... 그래도 영전



‘골프 접대’를 성심성의껏 진행했던 당사자는, iMBC의 허연희 전 사장과 천복용 이사였다. 고영주 이사장은 ‘허 사장이 접대하려고 그랬는지 골프 비용을 미리 계산을 했더라’며 당시 회동을 허 사장의 접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천 이사는 운전기사에게까지 해당 인사들을 ‘잘 모셨느냐’며 꼼꼼하게 지시하고 챙겼다. 스포츠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던 허 사장은 2013년 본인의 경력과는 큰 연관성이 없는 iMBC 사장으로 취임했다. MBC 기술국(81사번)으로 입사해 송출기술국 부국장, 미디어텍 본부장을 지낸 천복용 이사는 iMBC 경영을 총괄하는 사내이사였다.

하지만 이들의 본업인 ‘iMBC 경영 성적’은 그다지 신통하지 못했다. iMBC의 최근 3,4년간 상황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을 이것저것 벌려봤지만, 회사의 안정성과 내실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예전엔 5% 밀

으로 떨어진 적 없었던 iMBC의 영업이익률이, 거꾸로 허 사장 이후엔 5% 넘기도 힘들어졌다”는 냉소적인 평가도 나온다.

무리한 신규 사업·불투명한 채용

허 사장이 취임 초기 천 이사와 함께 추진했던 해외직구 배송대행 업체 ‘아이포터’ 인수는 결국 실패작으로 끝났다. 30억원 규모로 iMBC 창사 이후 최대 투자였고, 이례적으로 방문진까지 사업 보고가 이뤄졌지만, 불과 2년여 만에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하며 고꾸라졌다. “사내에서도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 찬반이 나뉘면서 격론이 있었지만, 허와 천 두 사람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게 내부의 전언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이동 조치되거나, 보직을 내려놔야 했다.

불투명한 채용 과정도 악명이 높았다. 신규 인력이 채용될 때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누구 라인을 탔다, 누구 뒷배로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전 사장들 때는 없었던 일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도 “사장인 내가 잘 나가는 외부 인사 추천만아서 데려오는 게 무슨 죄가 되겠냐”는 식으로 반응할 때면, 직원들은 ‘벽’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허연희 사장은 올해 3월, 부산MBC 사장으로 영전했다. 천복용 이사는 김장겸 체제가 들어선 이후 자회사 이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속에서도 연임에 성공했다. iMBC 내부에서는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라면서 씁쓸한 분위기였다고 전해진다. 회사 경영 실적과 내부 평가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사들이 계속해서 승진하고 영전하는 현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돈 돌려줘도 법 위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골프 비용에 대해 “‘김영란법’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다음날 송금해 줬다”고 해명했다. 문제의 골프 회동은 10월 22일, ‘김영란법’이 시행된 9월 28일 이후이다. 검사 출신이자 법률가인 고 이사장이 자신의 ‘김영란법’ 위반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방문진-MBC 자회사, 직무연관성 의문의 여지 없어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가 받을 수 없는 금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공직자는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을 받아선 안 된다. 직무와 관련된 경우 아무리 적은 금액도 안 된다.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MBC 자회사 대표 사이 “직

무 관련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골프는 물론 아침과 점심 등 식사, 고 이사장의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골프장까지 제공된 차량과 운전기사까지 모두 받아선 안 되는 “접대, 향응과 편의”였던 것이다.

더구나 고영주 이사장은 고가의 홍삼 선물 세트와 MBC 기념품으로 제작된 블록 장난감 선물도 함께 받았다. 1인당 선물 가격은 수십만 원대 수준으로 추정된다. ‘김영란법’은 식사나 선물, 경조사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선물의 경우 5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MBC 기념품 블록 장난감만으로도 넘을 수 있는 수준이다.

금품 반환해도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고 이사장도 물론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골프와 선물, 운전까지 비용을 넉넉하게 계산해 50만원을 돌려보냈다고 주장했다.

돈을 돌려보냈으니 죄가 없어지는 걸까? 미안하게도 그렇지 않다. 사후조치는 정상참작 사유일 뿐, 고 이사장의 김영란법 위반 범죄는 이미 허연희 iMBC 사장이 골프장 비용을 낸 순간 성립된 것이다.

더구나 ‘김영란법’은 금품을 받은 뒤 조치까지도 적고 있다. 금품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물론,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소속기관장 외에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고도 적었다. 고영주 이사장은 계좌이체를 잘 할 줄 몰라 딸을 시켰다고 묻지도 않은 구체적인 정황까지 내놨지만, 관계 기관 신고 조치에 대해선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선물을 바로 반환하면,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선물을 반환하였더라도,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경위, 금품종류, 반환여부 등을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김기춘, MBC로부터 또 특혜 의혹 김삼천 이사장과 함께 ‘프로암’ 골프 초청



뉴코리아CC 회동의 나머지 참석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삼천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MBC측으로부터 골프와 관련된 특혜를 받은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뉴코리아CC 골프 회동이 MBC 자회사인 iMBC 사장의 ‘집대’였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자회사 MBC 플러스가 제공한 특혜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삼천 이사장이 또 다시 함께 등장한다는 점에서 우연으로 돌리기엔 석연치 않다.

작년 7월말 MBC의 자회사인 MBC플러스는 경북 경산 인터볼고 컨트리클럽에서 KLPGA 대회인 “카이도 MBC플러스 여자오픈 대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본 대회를 이틀 앞두고 열린

‘프로암대회’ 현장에 김기춘 전 실장이 김삼천 이사장과 함께 나타났다. MBC플러스의 한 전직 운전기사는 “당시 MBC플러스 기사들이 아침부터 총동원돼 KTX 기차역으로부터 골프장까지 귀빈들을 모셨고, 자신이 운전한 차에 김 전 실장과 김 이사장 둘이 탔다”고 증언했다.

‘프로암대회’는 정규 대회에 참가할 프로 선수들이 대회 하루나 이틀 전, 주최측이 초청한 VIP 아마추어들과 함께 하는 경기를 말한다. 주로 대회에 협찬한 기업의 임원들이 초청되는데, 프로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펼치는 만큼 초청 받아라운딩하는 것 자체가 특권으로 간주된다. 주최측 내부 행사인 만큼 ‘갤러리’라 불리는 관객들도 없다. 일부 대회에서는 별도의 참가 비용을 받고 프로암 대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카이도 MBC플러스 여자오픈 대회”의 경우 참가 선수 144명 가운데 42명의 선수가 프로암 대회에 출전했다. 보통 프로 선수 1명과 초청 인사 3명이 한 조를 이룬다는 점을 감안하면 120명 정도가 초청된 셈인데, 김기춘 전 실장과 김삼천 이사장도 이날 행사에 초청된 만큼 프로 선수

와 함께 경기를 하는 특권을 누렸을 개연성이 높다.

그렇다면 누가 두 사람을 프로암 대회에 초청했을까? 공동 주최측인 골프용품업체 ‘카이도’나 골프장 측에서 청와대 전 비서실장과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초청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MBC 플러스 한윤희 전 사장에게 두 사람이 초청된 경위를 물었으나 “모르겠다. 초청자 명단은 저쪽(?)에서 정했다”라고만 답한 채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형관 MBC 플러스 이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허연희 당시 iMBC 사장은 “iMBC는 인터넷 중계만 주관했을 뿐이고 프로암 대회 초청은 주최사(MBC플러스)에서 했다”고만 밝혔다.



여의도 사옥 매각 종용

고영주 거짓 해명에 실무진 정면 반박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MBC의 서울 여의도 사옥 부지를 특정 사업가에게 팔도록 강요했다는 조합의 폭로(10월13일자 충파업특보 13호)에 대해 고 이사장이 교묘한 말장난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고 이사장은 해명을 요구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300억 원도 못 받던 걸 4800억 원에 팔면 MBC에 좋은 일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비상식적으로 수의계약을 강요한 행위를 뻔뻔하게 정당화하고 나선 것이다.

“4300억 원까지 떨어진 적 없다”

이에 대해 MBC 실무국장이 반박을 자청하고 나섰다. 자산관리국 김윤섭 국장은 언론노조 MBC본부와 만나 고 이사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김 국장은 “고

이사장이 언급한 ‘4300억 원’이란 액수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여의도 사옥 부지 가격은 한 번도 그 액수까지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2010년 1차 공개입찰 때는 홍콩 사모펀드와 5010억 원에 양해각서를 맺은 뒤 반년 이상을 끌다 무산됐다. 2013년 이후 진행된 2차 공개입찰에서 부지 매각대금 4800억 원에 계약이 추진됐다. “4300억 원도 못 팔던 땅”이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매각할 경우 더 골치 아픈 상황이었다”

김 국장은 더구나 “이 땅은 팔리지 않은 게 아니라, 팔 필요가 없어 MBC가 팔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당초 상암동 신사옥 건설비용을 충

당하기 위해 여의도 부지를 팔려 했지만, 2014년 이후 건설비는 모두 해결됐다. 굳이 부지를 팔아 수천억 원의 현금이 생긴다면, 적지 않은 양도세를 낸 뒤 남은 거액을 어떻게 쓸지 자금 운용 계획을 백지상태에서 새로 세워야 할 판이었다. 즉, 팔면 더 골치가 아플 상황이었다. 고 이사장이 마치 MBC의 골칫거리 해결에 나선 것처럼 설명하는 건 사실을 호도한 셈이다.

김 국장은 “고 이사장이 여의도 부지의 가치를 평가절하한다”며 “최소한 사실관계는 제대로 알고 일을 진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내막에는 결국 (사업가 하모씨와) 연결시키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왜 매각을 강요했는지, 사업가 하씨와는 어떤 사이인지, 다시 답변할 사람은 고영주 이사장 한 사람이다.

MBC 골프회원권도 방문진이 흥청망청

‘배임 수재’ 해당...“김영란법이 문제” 도덕적 해이

MBC 임직원들의 업무용 골프회원권을 관리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과 간부들이 제멋대로 사용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MBC는 경기도 가평 소재 크리스탈밸리CC의 무기명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다. 가격은 10억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자 섭외 및 광고주 행사 등 회사 공식 업무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이사진들과 심지어 사무처장까지 MBC 업무와는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했다.

“회원권이 닳는 것도 아니고...”

먼저 고영주 이사장은 이 회원권을 이용해 지난해 4월 23일 토요일 오전 7시 41분, 5월 14일 토요일 12시 54분, 6월 12일 일요일 12시 2분, 8월 7일 일요일 7시 13분 등 확인된 것만 수차례에 걸쳐 골프를 즐겼다. 횟수 제한 때문에 MBC 업무용으로도 쓰기 부족한 주말 황금 시간대를 골라 골프를 친 것이다. 고 이사장은 누구랑 함께 갔냐는 질문에 “내가 모시는 사람들”과 갔다고 했다. 사실상 ‘사적인 유용’을 시인한 셈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의 인식이다. “(회원권이) 닳는 것도 아니고 있는 재산을 이용만 하는 건데 당연히 칠 수 있는 것”이란다. 과연 법조인 출신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언행이다.

“MBC 임원들이 예약하고 돈도 냈다”

역시 여러 차례 회원권을 사용한 박천일 전 이사는 고 이사장 만큼이나 황당한 답변을 내놔다. 박 전 이사는 “임원들이 부킹도 하고 비용도 주로 그들이 냈다”며 사실상 접대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게 왜 접대냐, 임원진들과 업무 협의도 하고 친목 도모도 하는 건데”라며 교수라고는 믿기 힘든 도덕적 해이



를 드러냈다.

방문진 사무를 총괄하는 임무혁 사무처장도 2014년부터 최근까지 주말 황금시간대에 수차례 MBC 회원권을 이용했다. 임 처장은 처음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다, 자료를 들이밀자 “MBC가 써도 무방하다고 하니까 쓴 거지, 싫다고 하는 걸 쓴 게 아니”라고 시인했다.

회원권 한번 쓸 때 마다 80만원 이상 혜택

MBC의 무기명 골프장 회원권은 크리스탈밸리CC 1개 뿐이다. 공식 업무라 하더라도 사용 가능 횟수에 제한이 있어서, 담당 부서의 엄격한 통제 아래 사용해야 한다. 그런 만큼 MBC의 업무 기회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해명과는 달리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된다. 크리스탈밸리의 경우 주말 4인 이용료는 92만원에 달하지만, 무기명회원권을 사용하면 9만원에 불과하다. 이용할 때마다 80만원 넘는 혜택을 누렸으니 당연히 배임 수재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작년 9월 이후 사용한 경우라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다.

“‘김영란법’이 잘못됐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고영주 이사장은 김영란법 발효 이후에는 MBC 회원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김영란법 자체가 영

터리라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과거 자신이 고문을 맡았던 “사기업의 회원권을 이용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서 공영방송의 회원권 사용 역시 “김영란법의 유권 해석이 잘못된 것”이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사기업의 고문 자리와 공영방송을 감독하는 공공기관 이사장 자리의 무게감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고 이사장은 또 방문진이 MBC에 연수 기회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자신이 그 골프회원권도 이용 못하며 마치 방문진과 MBC가 자기 것인양 황당한 발언을 내뱉기도 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관리 감독 기관일 뿐 같은 법인이 아니다. 또 방문진은 법적으로 독립된 공공기관이지 고 이사장의 사적 소유물은 더더욱 아니다. 이 같은 발언은 고영주 등 방문진 이사들이 그간 MBC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그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회원권 유용’ 방문진 이사 검찰 고발

최근 방문진이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이유도 알 만하다. 방통위는 국민의 자산인 공영 방송사의 재산을 주머니 싹짓돈처럼 써온 방문진 이사진들의 도덕적 해이와 법 위반 사항을 철저히 검사감독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방문진 전현직 이사들과 간부들에 대해 배임수재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서초동 불려간 ‘PD수첩’ 파괴자

윤길용, 지난 13일 검찰 소환

2011년엔 ‘교양PD도 지방사 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대놓고 떠들던 남자. 그래서 결국 2013년 울산MBC 사장이 된 남자. 2017년에는 MBC NET의 사장자리까지 꿰찬 남자. 간단히 말해 시사교양 PD 중 누구보다 ‘성공’한 남자. 그러다 결국 검찰에 불려갔고 사법처리까지 거론되는 남자. 추락 중인 그 남자의 이름은 윤길용이다. 국정원의 MBC 장악 문건이 작성된 시점에 시사교양국장이었고 그때 행했던 인사가 국정원 문건과 일치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지금, 드디어 그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다.

윤길용은 2011년 2월 시사교양국장으로 부임했다. 김재철 당시 사장과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이라는 게 발탁 배경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부임 직후 그는 마치 준비했다는 듯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최승호PD를 포함한 6명의 PD수첩 PD들을 타부서로 쫓아냈고 이와 동시에 20명의 PD들도 발령했다. 시사교양국 PD인력 절반을 촘촘히 재배치한 것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급속한 인사 조치였다. 특히 최승호 PD를 PD수첩에서 쫓아낸 것에 대해 그는 유명한 궤변을 남겼다. “최승호씨

에게 자유로움을 주자.” 같은 해 5월, 윤길용은 또 다른 부당인사를 자행했다. MBC 역사상 최초의 부당전보 사건으로 이우환, 한학수 PD를 각각 용인드라마 개발단과 경인지사 수원총국으로 발령낸 것이다. 재판부는 두 PD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라 주문했다.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인사 조치를 아주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는 윤길용의 행보에 대해, 당시 시사교양국 PD들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의혹은 해소되지 못했고 그 사이 그는 시사교양국장을 거쳐 울산 MBC 사장이 되었다. 울산 MBC 사장 시절에는 회삿돈으로 안광한 전 사장,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등에게 고가의 선물을 제공했음이 MBC 감사 결과 밝혀졌다. 하지만 그에겐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울산MBC 사장 임기를 마친 후 지역MBC 프로그램 유통을 총괄하는 MBC NET의 사장이 됐다. 각종 부당인사를 행하고 공금 유용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승장구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지난 6년간 베일에 싸여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국정원 문건의 발견으로 윤길용의 배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3일 낮 2시에 출석한 윤길용은 다음 날 새



벽 1시에야 검찰청 출입문을 나설 수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길용을 기다리던 김재영 편제 조합원은 그에게 오래된 질문을 꺼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윤길용은 대답하지 않았다.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결정은 내가 한 것”이라며 드러냈던 당당함은 검찰 조사 11시간 만에 사라져버렸다. 거듭되는 질문에 윤길용은 “나도 모르겠다”, “위(검찰)에 다 말했다”며 대답을 피했다. 택시를 잡을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것인지, 윤길용은 새벽 이슬을 맞으며 서울중앙지검을 나서 서초역까지 하염없이 걸었다.

“신동호도 처벌하라”...검찰 고소



신동호 아나운서 국장이 고소당했다. 소장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한때 신동호와 동료였고 선후배였던 아나운서 28명이다. 어제(16일) MBC 본부와 아나운서 조합원들은 신동호를 부당노동행위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신동호는 2012년 파업에 참여한 아나운서 11명의 부당전보에 직접 관여했고, 이들을 방송제작현장에서 철저히 배제해 해당 아나운서들에게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 그는 파업에 참가했거나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는 아나운서들에게 인사고과 최하등급을 부여

하고 이들을 승진에서 누락시켰다. 또한 방송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를 드러내야 할 아나운서들을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인권 유린도 서슴지 않았다. 신동호는 부당전보 당한 아나운서들과 아나운서국에 남아있는 아나운서들의 교류 상황을 알아보는 등의 사찰까지 자행했다.

소속 국장을 직접 고소한 것은 PD수첩 팀 PD들이 조창호 시사제작국장을 고소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고소는 MBC를 정권에 헌납한 자들은 물론 실무에서 정권의 주문을 실행하며 사적 이익을 누려온 자들에 대한 단죄의 신호탄이다. 허일후 조합원은 “부당노동행위의 지시자 뿐만 아니라 실행자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신동호의 부당노동행위 지시와 실행의 전모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되고 조합은 안된다?

국회내 피케팅 자의적 법해석... '내로남불'

지난달 4일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당직자 90여명이 국회 안에서 대규모 피켓 시위를 벌였다. 시끄럽게 구호도 외치고, 동료 의원들의 사진 촬영도 막아서는 등 짐짓 결기 찬 모습이었다.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장 앞에서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20명이 피케팅을 벌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앞서 공영방송 사태 해결을 바라는 절박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침묵 피케팅을 벌인 것이다. 국회의원 통

행이나 국점감사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다른 당도 아닌 한국당이 발끈했다. 지난달 자신들의 국회 경내 피케팅보다 규모도 훨씬 적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떠한 침해 행위도 없었는데도, 조합원들의 침묵 피케팅을 불법이라며 반발한 것이다. 한국당은 “국회 안은 물론이고 국회 경내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외부인이 시위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엄포까지 냈다. 요란했던 자신들의 대규모 국회내 피케팅은 괜찮고, 조합이 한 침묵 피케팅은 불법이라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적반하장식 이중 잣대도 문제지만, 법 해석도 자의적이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집시법 11조를 보자. “누구든지 다음 각호(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등)에 해당하는 청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

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 ‘옥외’ 집회 금지에 관한 규정이다. 국회 경내 피케팅은 해당되지 않는다. 더더군다나 집시법 어디에도 ‘한국당은 되고 노동조합은 안된다’ 시위 규정도 없다. 불법 운운하는 한국당의 억지가 통하려면, 김장겸을 보호하기 위해 했던 자신들의 국회내 피케팅부터 ‘자수’ 해야 한다.

MBC 사측의 뉴스 보도 행태는 더 가관이다. 지난달 한국당의 국회 경내 피케팅 시위에 대해선 두둔만 했던 MBC사측 뉴스는, 조합의 침묵 피케팅에 대해선 한국당의 억지 그대로 불법이라고 악악거렸다. 뉴스의 공정성 객관성은 둘째 치고, 앞 뒤 안가리는 법 해석에, 이중 잣대까지 들이대면서까지 한국당의 기관지임을 자인한 것이다.



지역 MBC 간부들 잇따른 보직 사퇴

“김장겸 뿐 아니라 지역 MBC 사장들도 용퇴해야”

지난 13일, 지역 MBC 간부 5명이 보직 사퇴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보직자로서 회사를 지키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지만 MBC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 MBC맨으로서의 예의”라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또, “MBC가 정상화되는 길은 김장겸을 비롯한 MBC 경영진이 지금이라도 당장 용퇴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우리를 임명한 지역 MBC 사장들이 포함된다”며 지



역 MBC 사장들의 사퇴를 주장했다.

서울이 아닌 지역 MBC 간부들의 보직 사퇴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 MBC는 비교적 제작 자율성이 보장돼왔다. 하지만 MBC를 망친 경영진들이 지역 MBC 사장으로 자리를 꿰차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총파업의 발단이 된 서울 MBC의 제작거부 당시에 지역 MBC는 지역 뉴스의 서울 송고 거부로 힘을 보탰다. 총파업 40여 일이 지난 지금,

급기야 지역 MBC 보직 간부들마저 “지역MBC의 바닥을 알 수 없는 추락을 지켜보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딘지’를 오랜 시간 숙고한 결단”이라는 통탄과 함께 파업 합류 의사를 밝힌 것이다.

보직 사퇴 닷새째지만 사측은 반성은 커녕 꿈수로 대응하고 있다. 보직지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악용해 보직 사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떠난 마음을 꿈수로 붙잡을 수는 없다. 남아있는 지역 MBC 보직자들도 대부분 이번 총파업의 대의에 찬성하고 있다. 실제 대부분 지역 MBC 보직자들이 급여의 일부를 투쟁 기금으로 내놓는 등 후방 지원하고 있다. 서울에서 지역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이어진 견고한 스크럼은 결국 총파업 승리를 이끌어낼 것이다.